

December 2024.
No. 294

INSS

전략보고

남중국해와 도련선 분쟁: 전망과 제언

주동진 부연구위원
joo2868@inss.re.kr

- I. 문제제기
- II. 인도-태평양과 해양 안보
- III. 트럼프 정권의 등장과 美 해군의 행보
- IV. 제언 : 한국형 新 해양전략을 위한 첫걸음

남중국해와 도련선 분쟁: 전망과 제언

I. 문제제기

II. 인도-태평양과 해양 안보

1. 인도-태평양 內 미중갈등
2. 해양 안보와 지정학적 도련선

III. 트럼프 정권의 등장과 美 해군의 행보

1. 美 대선 결과와 '對中 포위망의 위기'
2. 美 해군의 위기의식과 K-조선업

IV. 제언: 한국형 新 해양전략을 위한 첫걸음

남중국해와 도련선 분쟁: 전망과 제언

저자 | 주동진

국문 초록

‘도련선(Island-Chains)’은 섬과 섬을 잇는 가상의 경계선으로서 국가마다 자국 중심으로 설정한 해양 안보의 영역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정치적·전략적 개념으로서 인식하며 역내 해양 리더십의 근간이자 진출 경로로서 삼으려 했고, 이에 미국은 이를 전략적·경쟁적 개념으로서 인식하며 중국의 해양 굴기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선으로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전략 상의 갈등적 대척점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도련선 분쟁은 ‘역내 화약고’로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국이 역내 해양 안보에 연쇄되어있는 이상, 도련선의 향방에 유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역내 남중국해에서 발발한 ‘대만-필리핀’ 이슈가 ‘일본-호주’ 이슈의 단계를 거쳐 ‘뉴질랜드-태평양도서국’ 이슈의 단계로까지 확대 중이다. 또한, 남중국해 핵심국인 중국은 군사적 활동을 증강하며 대만에 대한 야욕을 이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고, 중러와 공조 중인 북한은 ‘적대적 국가론’과 ‘핵개발을 통한 자력갱생’을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가 중러북 삼각관계 및 역내 해양 갈등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화만으로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는 국면에 도달한 것이다. 역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갈등의 연쇄구조’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한국이 ‘전략적 갈등 및 틈’ 속에서 글로벌중추국가(GPS, Global Pivoted State)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주제어: 인도-태평양, 남중국해, 해양안보, 지정학, 도련선

I 문제제기

■ 연구의 목적

- 본고는 미중갈등에 따른 해양전략 간 점점·충돌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 지도를 한반도의 틀에서 역내 인도-태평양의 틀로 확대·활용하고 이를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제시
- 따라서 본고는 △ 미중 간 해양 진출·봉쇄 현황 △ 도련선 형성과 현황 △ 그 지정학적·전략적 의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역내 해양 진출을 위한 국가전략을 구성·제언

■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한국은 '한미일 삼각공조' 확대·강화를 중심으로, 미중갈등에 따른 도련선 분쟁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점검·정리 필요
-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사이에서 고심 중, 이에 역내 지정학적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주시 필요→한국은 역내의 미중갈등과 높은 지정학적 연관성 보유, 이에 대비할 '청사진' 시급
- 본고는 △ 對韓 가치공유국·입장유사국의 행보·의도 △ 역내 여러 협의체의 허와 실 △ 각국의 행보들에 따른 지정학적·전략적 맥락 등을 점검·이해하는데 일조
- 또한 본고는 향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가 간 역학관계 △ NATO 등과의 연계성 △ 한미일·한일중 간 전략적 삼각관계 구축 △ 역외 대체 항로로서의 인도항로·북극항로 전망 등의 방향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제공

II 인도-태평양과 해양 안보

1. 인도-태평양 內 미중갈등

■ 新 냉전 속 미중의 對 ‘인도-태평양’ 접근¹

- 역내의 해양 갈등이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미일 중심의 한반도 주변 세력권과 그 연장선에서 남중국해-인도양-태평양 등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층위를 통해 발생·확산²
- 특히 역내 미중갈등이 양국의 해양전략 간 갈등으로 비화, 그리고 이는 역내에서 3겹으로 중첩된 ‘도련선(Island-Chains)’의 경계를 따라 구체화·가시화³→ ‘해양 안보(Maritime-Security)’의 부상
- 이에 역내 여러 유관국은 각국 海軍 전력·전략에 관심을 표명하며, 自國의 리스크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역내에서 여러 ‘전략적 관점’ 간 부상·경합을 유발
- 미중갈등에 따른 도련선 분쟁은 이후에도 △ 모호한 가상의 경계선 △ 역내 지정학적 공간의 특징 △ 역내 여러 국가 간 균열·진영화 △ 해양전략 上 진출·봉쇄 간 경쟁 △ 남중국해 인근의 유관국들 개입 등을 통해 지속 전망

■ ‘한국 인근’ 미중갈등과 도련선 분쟁

- 미국에 의한 ‘對中 해상 포위망’이 ‘도련선 분쟁’으로 진화·심화

1 Adam P. Liff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39-2 (2014), pp. 68-69.; Hal Brands and John Lewis Gaddis,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2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3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3). 한국의 해양전략과 불가분한 인도-태평양 해역은 글로벌 해상운송의 약 50%를 담당, 그리고 대만해협은 말라카해협과 함께 역내 주요국들의 해상운송로·교통로 상의 ‘동맥’에 해당. 특히 해당 공간은 ASEAN·오세아니아·남아시아·아프리카·인도양연안국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보적 특성상 각국의 해군이 가지는 역할과도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갈등이 빈번한 공간’으로서 불가피. 이에 각국은 국제법상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각각 자국에 적합한 ‘해양 영역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우선 미국은 2022년 6월 △ 19~24일에 걸쳐 태평양에서 美항모를 동원해 일본·호주와의 연합훈련 실행 △ 25일 미일 해상 보급훈련 실행 △ 29일 한국을 포함해 26개국과 림팩(RIMPAC) 훈련 개최
 - ※ 2022년 6월 29~30일 스페인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을 초청해 공동 협력을 강조, NATO는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규정하는 ‘新 전략개념’을 발표
- 다음 중국은 제한적인 자원을 ‘대만 압박’에 치중하며 미국의 시선을 ‘태평양도서국에서 제1도련선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데 주력 →이러한 중국의 對美 대응은 ‘QUAD·AUKUS·Five-Eyes 등의 역내 親美 협의체에 따른 對中 포위망 강화’로부터 기인⁴
 - ※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內 행보’를 ‘중국의 일대일로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에 휘방을 놓기 위한 시도’로서 인식⁵
- 그러나 이는 동시에 △ ‘중국의 미국發 對中 포위망 우회로’를 위한 동남아 內 ‘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 간 일대일로 관련 전략적 루트(運河)’ 개발 △ 그에 따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파생
- 나아가 이와 맞아떨어진 동남아 內 ‘친미’ 필리핀의 행보는 ‘對中 갈등’과 함께 역내의 다른 ‘친미 진영’인 일본·대만을 유인하며, 그 지정학적 위치에 해당하는 제1도련선을 군사적으로 강화·부각
- 이후 ‘역내에서 활성화된 도련선 분쟁’은 계속 구심력을 발휘
- 결과적으로 역내 지정학적 맥락은 △ 남중국해 內 ‘9단선’ 논쟁 부각 △ 美 격자형(lattice-like) 군사적 안보 체계 활성화 △ 對中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지속성 확대 등으로 귀결⁶

2. 해양 안보와 지정학적 도련선

■ 역내 ‘무계추’와 지정학적 도련선

- 미국의 ‘對中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은 역내에서 여전히 유효⁷ → 미국은 중국發 해양 굴기에 맞추어 유효한 봉쇄전략을 고안·추동, 그리고 그 봉쇄전략은 ‘도련선’의 형태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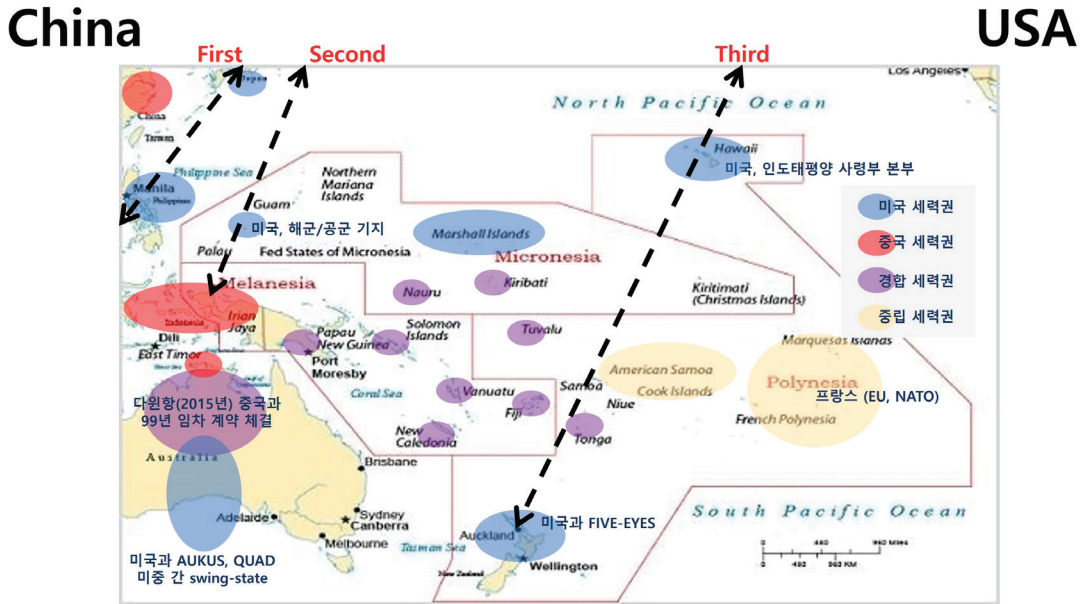
4 주동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키스 확대가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INSS 이슈브리프 561호 (2024, 6월).

5 David Dodwell, “Belt and Road Isn’t Going Away: Get Used to It,” *Global Asia* 14-2 (2019), p. 61. 중국의 전략은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으나, 어디까지나 ‘중국 중심의 관점에서’ 평화와 발전을 표방. 이에 서구진영은 ‘권위주의체제 국가들과 대립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해당 전략을 △ 민주주의 기반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명분 △ 개발도상국에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한 ‘부채의 덫’이라 비판 반복.

6 주동진, “필리핀의 친미·반중 행보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INSS 이슈브리프 572호 (2024, 7월).

7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h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Annual Report* (February 5, 2024).

[그림 1] 태평양도서국의 '미중 간 진영화'와 제1~3 도련선 간 상관관계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 필자 참조 및 편집.

- 태평양도서국은 동남아 내 진영화와 연동된 만큼 지정학적 관점이 필요, 특히 태평양도서국은 미국과 중국이 점진적으로·비가시적으로 그 영향력을 침투시키고 있는 만큼 긴밀하게 주목 필요⁸
 - 실제로 [그림 1]과 같은 역내의 미중 간 '경쟁적' 행보는 근래의 '태평양도서국의 지정학적 위상의 浮上'에 맞추어 이루어짐으로써, 중국 해양 진출전략의 구체성을 갈수록 확대·부각
 - 특히 무역·공급망 재편·분절화와 반도체·첨단기술 이슈 등의 등장은 진영경쟁의 측면에서 '이미 해양 강국인' 미국의 해양 패권 유지와 '대륙국인' 중국의 해양 진출전략 간 충돌을 유발 지속⁹
 - 결과적으로 도련선은 '역내 갈등의 무게추'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역내 해양 안보의 각종 이슈·현안들을 끌어들이는 구심력을 발휘→ 또한 '남중국해'와 '태평양도서국' 간 지정학적 결합도 유발
- '중국의 해양 진출전략 VS 미국의 해양 봉쇄전략' 시나리오
 - 중국은 [그림 2]와 같이 향후 '역내 지정학적 진영화 현상'을 배경으로 크게 3가지의 '反도련선' 경로를 고안·시도 예상→여기에 '인도양·북극해' 등 역외 경로를 포함하면 5가지 경로로 확대 가능
 - 3가지는 각각 ① 일-대만 간 해역 돌파 경로 ② 대만-남중국해 간 해역 돌파 경로 ③ 동남아 국가

8 주동진, “미중갈등에 따른 태평양도서국의 진영화와 한-태평양도서국 전략,” INSS 전략보고 288호 (2024,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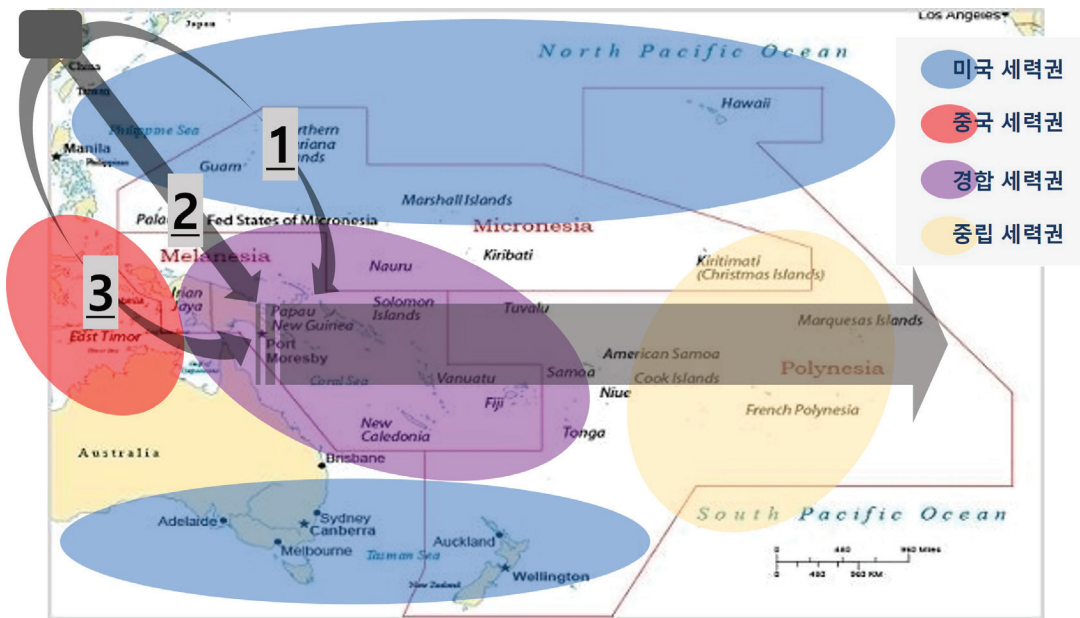
9 Michael Beckley, “China’s Century? Why America’s Edge Will Endure,” *International Security* 36-3 (2011).

를 관통하는 대륙-해양 혼합 경로, 특히 여기서 ①②는 ‘도련선 돌파’ 경로에 해당

※ 중국이 ‘남중국해-태평양’ 항로를 단념할 수 없는 이유로는 크게 △ 미래자원 확보를 위한 개척지 △ 글로벌 물동량 20%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의 海上 운송로 △ 中 해군의 대양 진출 관문 △ ‘역내 패권’의 對美 성장한계 돌파 등 4가지 제시 가능

- 미국은 중국이 ‘도련선을 돌파하는 행태’에 맞추어, 지금까지처럼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 등에 미 사일을 추가 배치하거나 여러 국가가 합류하는 해상 연합훈련 진행 전망

[그림 2] 중국의 ‘미국發 對中 포위망’ 돌파 전략과 그에 따른 경우의 수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 필자 참조 및 편집.

- ①의 활성화 조건은 △ 센카쿠 해역을 ‘회색지대’ 전술 등으로 무력화 △ 괌·팔라우 인근 ‘美 해군’ 영역에 군사력 집중 투자 → 그러나 이 경로는 미·일과의 군사적 충돌을 전제해야만 하는 가장 ‘소모적이고 갈등적이며 비현실적인’ 경로에 해당

※ 이 경로는 제1도련선에서 군사력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서 중국이 단독으로 모든 자원과 부담을 감당·소모해야 하는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경로, 또한 대만·필리핀 등의 후방 우려도 존재

- ②의 활성화 조건은 △ 중국의 대만·대만해협 통제 △ 미·일의 ‘소모된 해군력’ △ 태평양도서국의 ‘親中 진영화’ 성공 △ 단기간 內 진격전 → 그러나 이 경로는 해상진격전 과정에서의 소요 시간이 길어지면 ①과 같은 제약이 발생하는 경로에 해당

※ 중국은 항모를 4척째 건조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가시화, 그러나 인접한 일본·필리핀·대만도 마찬가지로

군비 확충에 집중 중이기에 ‘대만 유사’時 ‘소모전·장기전’ 양상의 발생 가능성 농후¹⁰

- ③의 활성화 조건은 △ 동남아 內 육상 경로 확보 △ 미얀마·태국·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관련 ‘親中化’ 달성 및 ‘육상-해상 복합 경로’ 구축 △ 솔로몬제도·파푸아뉴기니·호주 관련 태평양 內 영향력 투자¹¹→그러나 이 경로는 ‘미얀마의 내전 상태’ 및 ‘호주 등 태평양 內 불분명한 親中化’를 통제·지속해야 하는 경로에 해당

※ ③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투자 및 지원 등이 필요, ‘준비·대비’ 태세가 길어 질수록 막대한 기회비용 낭비 초래→특히 남중국해의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전략적 손실 가중 전망

- 결과적으로 중국은 역내 역학적·지정학적 상황을 배경으로 외교적 기회비용과 전략적 유효성 및 군사적 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하며 그나마 ③을 선택·개발·견고화할 가능성 농후
- 또한 [그림 2]에서 제시된 ‘진출’ 전략이 모두 실패할 경우, ‘3가지 경로’ 모두는 중국의 ‘성동격서’를 위한 뗏이 될 것이며, 그 북쪽과 서쪽을 기준·배경으로 각각 새로운 해양전략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

※ ex) 북쪽으로 ‘동해-북극’ 항로, 서쪽으로 ‘남중국해-인도양’ 항로 등

10 David Lauge and Maryanne Murray, “T-Day : The Battle for Taiwan,” *Reuters Investigates Special Report* (Nov.5, 2021); Mark F. Cancian,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A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January 2023).

11 ③은 중국의 동남아 內 ‘일대일로’ 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관. 실제로 중국은 동남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친중’ 진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며, △ 캄보디아에 약 17억 달러 상당을 투자해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거대 운하 공사를 올해 8월 개시 △ 캄보디아 서남부 레암 해군기지 점유율 확대 △ 그 외에도 해당 경로와 직접적 유관국인 말레이시아·태국 등의 브릭스(BRICS) 합류 등을 추동.

III 트럼프 정권의 등장과 美 해군의 행보

1. 美 대선 결과와 ‘對中 포위망의 위기’

- 트럼프 정권과 美 우선주의(MAGA)의 浮上 가능성

-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선후보가 당선, 이에 美 우선주의의 재등장 가능성이 浮上
- 美 대선의 여파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전망→역내 국가들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美 주도로 이루어진 ‘對中 포위망’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각각 몰두
- 과거 미국은 트럼프 前 대통령 1기 때 시작된 중국과의 관세전쟁 이후로 미중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 5월에 태평양사령부 (PACOM)를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로 개편하고, 해당 내용을 2018년 美 국방전략(NDS)에 반영
 - ※ 트럼프 2기는 이전보다 강한 국정동력을 가지고 출발하는바, 중국을 비롯한 여러 유관국의 안보 대비를 위한 경쟁 가열 전망

- ‘對中 포위망의 위기’?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對中 전략의 강화’와 직결,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도 ‘디리스크(de-risking)→디커플링(de-coupling)’ 변화에 따른 ‘관세전쟁 격화’ 발생 전망
- 작금의 ‘美 격자형 안보 구조’는 유지되겠지만, 그 규모와 종류의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 현상 발생 가능→인도-태평양 內 협의체의 향방 및 美-NATO 관계에 대한 주시 긴요
- 美의 前·現 행정부 모두가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나, ‘동맹국에 대한 조치’에서는 일부 차이
- 이러한 행태는 美의 ‘對대만 전략’ 변화에서도 발생 가능→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대선 유세 과정에서 대만과 관련해 ‘대만 보호 중지’ 및 ‘대만의 반도체 사업 압박’ 등을 역설
-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국과의 거래적(transactional) 관계’ 기조를 적용할 경우, 이는 ‘대만유사-대만해협-남중국해-말라카해협’ 등의 순차적 연쇄 파동을 야기 소지→ ‘제1도련선 붕괴’ 가능성 성립

- 트럼프가 활용할 ‘동맹과의 거래’와 ‘對中 포위망’ 레버리지

- 트럼프 당선인의 ‘이익 중심’ 기조에 대한 전략적 판단 중요

-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과 관련해 ‘압박을 통한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 및 ‘美 무기 구매’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對中 관세를 통한 이익 추구’ 및 ‘역내 현상유지 관련 안보 비용 절감’ 등도 추구할 가능성 농후→역내 현상유지 관련 ‘마지노선에 대한 定義’ 필요
-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일본의 역내 관련 지정학적 위기의식을 전략적·거래적 대상으로서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 요망

2. 美 해군의 위기의식과 K-조선업

- 해양 안보로 인해 浮上한 ‘해군력의 중요성’과 ‘생산력 경쟁’
 - 美 해군의 ‘인프라 및 플랫폼’ 부실 현상은 對中 해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¹² 이에 미국은 해군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고심
 - 중국이 미국보다 역내에서 지정학적·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쉬운 점을 유념→특히 미중 간 해양 전력 격차는 각국의 군함 생산량과 생산 속도 간 차이로 인해 배제 불가, 그리고 이는 역내에서 ‘방산 경쟁’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도 고조 유발
 - 美 해군은 중국군을 작국의 ‘최우선 도전과제’로 인식하며, 새로운 ‘2024 항해계획’을 발표→그 가운데, 美 해군의 ‘Project 33’ 항해계획은 ‘2027년 중국 건국절 100주년에 따른 대만 유사’에 대비한 美 해군력의 군비 완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해당¹³
 - 특히 미국은 해양 안보의 측면에서 해군력 제고를 위해 △ 중국의 대만침공 억제 △ 첨단 무인체계 확충 △ 현안들 관련 핵심 인프라 복원 등 핵심 분야를 선정, ‘인프라 복원과 플랫폼 준비’ 측면에서 韓 조선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
- K-조선업의 기회요인 및 도전요인
 - 트럼프 美 대선 당선인은 최근 ‘韓 조선업과의 협력 기대’를 표명

12 Alexander Palmer, Henry H. Carroll, and Nicholas Velazquez, “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 *CSIS Transnational Threats Project Report* (June 5, 2024). 현재 중국의 군함은 234척으로 미군의 군함 219척을 능가. 이러한 중국의 ‘양적 우세’는 군사전략 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특히 해당 보고서는 각국 내 조선업 현황에 주목, 미국의 조선업 재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역내에서 중국군이 가지는 우위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

13 Lisa M. Franchetti, “Navigation Plan 2024,” *U.S. Navy Annual Report* (September, 2024). 美 해군의 참모총장인 리사 프란체티 제독은 해당 계획을 2년 만인 2024년 9월 18일에 발표, 2027년까지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해군의 상대적·장기적 우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표방. 해당 프로젝트는 ‘美 해군의 조선 능력에 관한 우려’에서부터 출발했으며, 고임금 및 숙련공 부족 등을 통해 야기된 美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더욱더 광범위하게 주목받는 중.

- 미국은 한국·일본 등의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부활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처지→실제로 美 해군은 한국·일본 등의 조선소에서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美 군함을 수리할 예정
 - ※ 한국의 '한화오션'은 미국의 '존스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션소' 지분 100%를 약 1억 달러에 구매¹⁴→ 이는 미국 내 군수산업의 국제화 및 거점화를 시사
- 그러나 향후 미국 정부에 의한 '방위비 인상 및 미북 협상에서의 패싱' 등의 도전요인도 발생 가능,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를 위해 기회요인·도전요인 간 공통분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상쇄할 필요 존재
- 현재 한국해군은 인도-태평양을 대상으로 한 △ 해상교통로(SLOC) 보호 △ 해외 협력항만 확보 △ 다국적 해양연합훈련 참가 및 주도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 △ 국제 방위산업 협력 △ 해양 안보역량 강화 등을 계획·추진 중
-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역내 미중갈등이 격화될수록 전략적 '진영·노선' 논쟁에 얽매일 가능성 농후¹⁶→향후 한국의 시의적절한 시도 및 접근 방식에 따라 국익 증진 기회 점증
- 한국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협상의 기회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 확보 중요→한국은 동북아 내 지정학적 협착 공간에 위치하기에, 협상의 실패는 한국의 입지 축소와 전략적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유념

14 미국의 '존스법'은 미국 내 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를 미국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한 법.

15 이는 미국이 현행법의 차원을 넘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경계하고 있는가를 시사. 실제로, 당시 美 해군성 장관인 카를로스 델 토로는 '한화오션의 지분구매'를 두고 'game changing milestone'이라는 평가 및 성명서까지 발표한바 존재.

16 Graham Allis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lues from History," *Aspen Institute* (Feb., 2020).; Victor D Cha, "Allied Decoupling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3-4 (Winter, 2020).

IV 제언: 한국형 新 해양전략을 위한 첫걸음

- 한국의 '도련선 접촉'을 가정한 '新 해양 안보적 인식' 조성
 - 한국은 기존의 유엔사·주한미군·전략사령부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한미일 V.S. 중러북' 구도의 고착화 회피 추동
 -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한반도 역내'로서 인식, 'Korea-Passing' 및 '대만유사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 입안 추동

- 한국은 △ 방산 역량 △ 지역 전략 등 2개의 층위에서 '해양 안보' 관련 Two-Track 전략 구축
 - 한국은 자국 내 '방산 역량'을 개발·강화·투사, '역내 전략적·방산 거점'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상을 구축·강화¹⁷
 - 한국은 주요 유관국 등을 대상으로 한 △ ASEAN+α (동남아와의 접근성 강화) △ MIKTA (인도·호주와의 접근성 강화) △ CPTPP (일본·호주와의 접근성 강화) △ ALTASIA (인도·일본·대만과의 접근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 연계망 강화·확대' 추동
 - ※ 지역 전략의 첫 단계로서 'ASEAN 중심성'¹⁸ 거버넌스에 밀착
 - 한국은 최근 동남아 순방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해양 협력 강화를 추진, 이는 역내 해양 안보 영향력 확대 및 핵심 해상물류 교통로 안정화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선례¹⁹

17 美 해군은 중국 해군과의 역내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함정의 생산능력과 생산비용에 있어서 한국 조선업계에 주목. 특히 미국의 조선업은 세계대전 직후 계속 사양화되고 있기에 △ 미국 조선소의 수 급감 △ 미국 전체 군함 수의 반감 △ 중국 조선소의 증가 △ 중국 정부의 보조금 투입 △ 중국의 전체 선박 수 미국 추월 △ 미국의 공급망 위기의식 등을 위한 협력국을 모색. 여기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뛰어난 조선 능력을 유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을 활용한 해군력 회복 추동 행보' 가속화 발생.

18 10개국을 대상으로 형성된 ASEAN은 설립된 이후 57년이 지났으며, 성공적인 지역 공동체로서 매년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다자회의의 기회'로서 인식 및 활용되는 중, 특히 이러한 흐름은 여러 국가를 유인하며 ASEAN+3(한·일·중)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 포함)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 ASEAN은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이라 인식·표명. 나아가 한국은 ASEAN과의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동하며, 2022년에 개최된 Korea-ASEAN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ASEAN과의 연대구상(KASI, Korean-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차기 단계를 구체화·가시화 추동. 특히 한국이 2024년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의 '8·15 통일 독트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핵화의 불가역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외교적·전략적 위상을 견고화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 또한 한국은 여기서도 '남중국해 상 항행의 자유'를 표명하며 한미일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데에도 성공.

19 우리나라는 2024년 10월 여러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동남아 순방에서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를 방

- 한국은 K-조선업의 해양전략 상 활용을 위해 'KPN-Plan' 진행
 - 역내 협력 연계망은 향후 한국의 對 인도-태평양 新 대외전략 비전인 'KPN(Korea-Pacific Network)'의 형태로 구체화·확대 전망
 - ※ '지역 범주' 협력체계는 한국의 '海上 무역로 상 필수 중계지'로서의 위상·지위를 견고화하는 데 일조, 그리고 그 활동의 연장선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Passing-Risk'를 선제적으로 포착·예방·대비할 수 있는 新 '한국 역할론' 창출 기대
 - 한국 해양전략의 지정학적 전환 및 대응의 가속을 위해, 그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K-조선업을 위한 '韓 MRO' 지원·투자 제언²⁰
 - ※ 한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內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지·보수·정비 (MRO) 계획에 따른 '지역 기반 지속 지원 프레임워크(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전략에 참여 시작,²¹ 정부의 지원을 통한 사업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內 연계 구조'와 '아시아-태평양 유관국 지위'를 '불가침化'하도록 촉구

문, 필리핀과 10월 7일 '한-필리핀 해양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역내에서 '자유로운 항행의 자유'에 근간한 해군력의 영향력 투자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구축.

- 20 한국은 최근 △ 2024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4차 북태평양 해양치안 기관포럼(NPCGF) 기관장 회의 참석 △ 2024년 10월 ASEAN 관련 여러 정상회의 참여 및 호주 등 주요 유관국들과의 양자 간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해양 영향력 투자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효과적으로 지속·확대 중.
- 21 해당 전략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 內 제조업·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美 해군의 요청으로부터 출발. 해당 전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이 필수적이며, 한국은 그 대상국으로서 매우 적합한 생산 역량을 보유. 이에 한미 간 '방산' 연계 구조는 동맹국 간 산업기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등의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도 유효한 '버팀돌'이 될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주동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키스 확대가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INSS 이슈브리프 561호 (2024, 6월).

_____. “필리핀의 친미·반중 행보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INSS 이슈브리프 572호 (2024, 7월).

_____. “미중갈등에 따른 태평양도서국의 진영화와 한-태평양도서국 전략.” INSS 전략보고 288호 (2024, 10월).

Allison, Graham.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lues from History.” *Aspen Institute* (Feb., 2020).

Beckley, Michael. “China’s Century? Why America’s Edge Will Endure.” *International Security* 36-3 (2011).

Brands, Hal. and John Lewis Gaddis. “The New Cold War: America, China, and the Echoes of Hi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1).

Cancian, Mark F. Matthew Cancian and Eric Heginbotham.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A Report of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January 2023).

Cha, Victor D. “Allied Decoupling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3-4 (Winter, 2020).

Dodwell, David. “Belt and Road Isn’t Going Away: Get Used to It.” *Global Asia* 14-2 (2019).

Franchetti, Lisa M. “Navigation Plan 2024.” *U.S. Navy Annual Report* (September, 2024).

Lauge, David. and Maryanne Murray. “T-Day : The Battle for Taiwan.” *Reuters Investigates Special Report* (Nov.5, 2021).

Liff, Adam P. and G.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39-2 (2014).

Mead, Walter R.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Palmer, Alexander. Henry H. Carroll, and Nicholas Velazquez. “Unpacking China’s Naval

- Buildup,” *CSIS Transnational Threats Project Report* (June 5., 2024).
-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3).
- 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h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Annual Report* (February 5., 2024).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

Abstract

South China Sea and Island-Chain Disputes: Prospects and Recommendations

Joo, Dong-Ji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land-Chain' is a virtual border connecting islands and embodies the area of maritime security established by each country centered on its own territory. And China recognized this as the political and strategic concept and attempted to use it as the basis of maritime leadership in the region and as the 'debut route', accordingly, the U.S. recognizes this as the strategic and competitive concept and is applying it as the baseline to block the 'Chinese maritime rise'. In this way, the 'Island-Chain' disputes, which is emerging as the conflicting points in maritime strategy, is evolving into the 'regional flash point'. Since Korea is involved in regional maritime security, this is why we must keep in mind the direction of 'Island-Chain'. Currently, the 'Taiwan-Philippines' issues that arose in the South China Sea is expanding through the stage of the 'Japan-Australia' issues to the stage of the 'New Zealand-Pacific Island States' issues. In addition, China, the 'key' state in the South China Sea, is increasing its military activities and is now openly revealing its ambitions toward Taiwan, also North Korea, which is cooperating with China and Russia, is proclaiming the 'hostile-state theory' and 'self-reliance through nuclear developments'.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the 'phase' where it can no longer be satisfied only by the 'Korean Peninsula stabilizing' due to the 'China-Russia-North Korea triangle' and 'regional maritime conflicts'. There is an urgent need to address the 'chain-structure between conflicts' operating in the region. We hope that Korea will secure the stable foundation to realize the 'GPS(Global Pivoted State)' vision amidst 'strategic conflicts and gaps'.

Keywords: Indo-Pacific, South China Sea, Maritime-Security, Geopolitics, Island-Chai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December 2024.
No. 294